강진 TV 난시청 9월까지 해소

郡-KBS 양해각서 체결

강진군 일원이 TV 난시청으로부터 완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과 KBS(한국 방송공사)는 지난 20일 군청 회의실에서 강진지역 TV 난시청 해소를 위한 공동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군과 KBS가 산간 오지, 독가촌 및 도서지역의 TV 난시청 해소를 위해 관내 7개 읍·면 450여 난시청 세대에 무궁화 위성안테나를 설치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30일까지 KBS 주관으로 현장 확인 후 마을 공동 수신장치나, 가구별 수신기를 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 부담 없이 설치하게 되며, 소요 비용은 군과 KBS가 6대4로 각각 부담한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광역단체 정부감사에 기초단체 왜 부르나

"중복 감사로 부작용 크다"

일선 지자체, 일원화 촉구

정치권에서 현행 중앙부처의 광역·기초 자치단체 감사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 합동감사를 놓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 피수감문제로 마찰이 빚어지고 있어 효율적인 감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전남도와 장흥군 등에 따르면 행자부를 비롯한 중앙 각 부처가 합동으로 지난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전남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서 합동감사'에서 실제로는 도 본청공무원보다 일선 지자체 공무원이 감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 같은 일은 정부합동감사는 피수감기관이 광역자치단체이나, 광역자치단체는 실제 사업을 집행한 기초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며 일선 지자체의 관련 공무원을 불러들여 감사를 받게 하는 등 일선 시군에 감사를 떠넘기고 있는 실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국책사업의 경우 예산사용 적정성과 사업성과 여부를 지도·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일선 지자체에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서류 일체를 요구하고 있어 업무 과중과 시간적 낭비 등 부작용이 커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장흥군 공무원들은 매 2년 주기로 업무 전반(국책사업 포함)에 대해 도 종합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감사로 감사권 침해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에 위배되는 것으로, 도 종합감사와 정부합동감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일선 기초자치단체장의 횡포와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현재 열린우리당의 법안인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등 지자체에 대한 감사권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보성·벌교·회천 하수관 정비 재개

주암호를 비롯, 여자만과 득량만 수질 개선을 위한 '보성·벌교·회천 하수관거정비 공사'가 공사 중단 3개월 만에 최근 재개됐다.

22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착공해 내년 11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보성·벌교·회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한강수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37억8천4백만 원(국비 70%, 군비 30%)을 투자, 6월 말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업의 총 관거연장은 보성 23㎞, 벌교 28.1㎞, 회천 5.8㎞ 등 56.9㎞에 달한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우수(雨水)와 오수(汚水)를 분리해 우수는 하천에 방류하고, 오수는 하수처리장까지 차집관로를 설치, 하수처리 효율을 극대화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보성에서 치러졌던 도민체전, 다향제, 지방선거 등으로 지난 4월 일시중단됐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순천시 민선 4기 출범 앞두고

시장 집무실 이전 '논란'

순천시가 민선 4기 출범을 앞두고 집무실 이전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총 사업비 4천900여만원을 투입해 민선 3기 조충훈 전 시장이 사용했던 투명 유리벽 집무실을 기획감사실로 변경하고 기획감사실을 신임 시장 집무실로 교체하는 공사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집무실은 민원인들 집회시 확성기 소리에 영향을 받고 건물 노후화로 채광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지난 97년에 시행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 편익을 위해 민선 4기 집무실을 교체하게 됐다"고 이전 공사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새로운 시장이 들어설때 마다 집무실을 바꾼다고 달라진게 뭐였냐"며 "쇄신과 혁신은 이벤트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또 "순천시 공사는 550만원이 넘을 경우 전자입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처리돼 민선 4기 출범부터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위법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는 민선1기부터 3기까지 역대 순천시장들이 집무실을 투명 유리벽으로 교체하면서까지 '투명행정'을 약속했지만 결국 뇌물수수 등으로 모두 수감된 경험에 따른 것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